

최신변이 백신 선택지 4개로... 저조한 접종률 끌어올릴까

식약처, 삼바서 생산하는 2가 백신
모더나 스파이크박스2주 사용승인
오미크론BA.4·5에 중화항체 반응

코로나19 바이러스 BA.4·5 변이에 대응하는 두번째 백신이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 선택지는 총 4개로 늘어났다. 여전히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7일 먼저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코미나티2주'에 이어 BA.4·5 대응 백신은 2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스파이크박스2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실에서 의료진이 모더나사의 코로나19 2가 백신인 스파이크박스 2주를 분주하고 있다. /뉴스시스

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이 백신은 원료

를 외국에서 공급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해 국내 공급한다.

모더나에 따르면 BA.4·BA.5를 함유한 스파이크박스2주 백신 임상에서

모더나의 기존 백신 스파이크박스주보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체 BA.4와 BA.5에 대한 강력한 중화항체반응을 확인했다.

스파이크박스주 접종 그룹과 비교해 BA.4·5를 함유한스파이크박스2주를 접종한 그룹의 BA.4·BA.5 대항 기하평균역가비율은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에 각각 5.11배, 6.29배로 확인됐다. 스파이크박스2주의 부작용은 스파이크박스주 두 번째(기초 접종) 또는 세 번째 접종(부스터샷)과 유사하거나 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스파이크박스2주'의 긴급 사용승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감염내과, 약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5인에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추가접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변이 대응 2가 백신은 모두 4종류로 늘어났다. 현재 초기 오미크론 변이인 BA.1에 대응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2가 백신 2종과 화이자의 BA.4·5 백신 1종이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최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접종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접종률은 지난달 3일과 비교할 때 60세 이상은 8.4%에서 20.5%로, 감염취약시설은 5.0%에서 26.7%로 증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尹 대통령 “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 하도록 준비”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 대책회의
“기업·국민 불편 최소화 조치 강구
조직적 불법·폭력행위 행사할
타협 안하고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정유(탱크로리)·철강 등의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불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

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영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계장관들을 향해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폭

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영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불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리오프닝’ 시간은 걸릴 듯

● 차이나 뉴스&리포트

중 당국, 베이징 PCR검사 완화
고령층 백신접종 목표 등 전달

“감염사례 급증할 수밖에 없어
감염자 감소 이후 경제회복 가능”

중국식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시작됐다. 대규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한 선제적인 감염자 선별과 엄격한 봉쇄 등 ‘제로 코로나’ 방역을 가능케 했던 대표 조치들이 대거 완화됐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증상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전하는

등 방역 정책의 전환은 확실해졌지만 관건은 속도다. 중국의 백신접종률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4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수도인 베이징은 이달 1일부로 PCR 검사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지역 필수인프라인 의료시설의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PCR 검사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 중인 학생이나 사회활동이 없는 노인·영아들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24~72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만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거주지에 귀가시에도 음성 결과가 없으면 제재를 받을 정도였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고강도 방역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다.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시민 생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해 나갔다. 봉쇄 지역의 신속한 해제 등을 포함해 과도한 방역은 금지하고, 고령자의 백신접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이신에 따르면 이미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목표가 각 부처에 하달됐다. 내년 1월 말 전까지 ▲8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90%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의 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률 90% ▲60~79세 고령층 중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의 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률 95% 달성 등이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백신 2차 접종률은 86.4%, 고위험군인 80세 이상 2차 접종률은 65.8%에 불과하다.

리오프닝을 위한 명분도 쌓는 중이다. 중국의 방역 사령탑인 쑨춘란 국무부 부총리는 최근 방역 회의에서 대표 정책이었던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를 언급하는 대신 ‘코로나19의 최신 변이인 오미크론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방역 정책 완화는 감염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백신접종률은 여전히 낮고,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다.

노무라의 루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식 위드 코로나의 길은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많이 들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감염 사례가 수백만건으로 급증할 것이며 내수 반등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회복은 감염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다.

회사 등 많은 공공장소는 여전히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염자 발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24시간내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